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일자리 확대·기업 유치 기대”

전남도·광주시, 시도민 보고대회 개최

40년만의 행정통합...초광역 320만 생활·경제권 출범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20조 재정지원 기반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40년 만의 행정통합이 가시화된 가운데,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통합 이후 가장 기대되는 변화로 '일자리 확대'와 '기업 유치' '균형발전' 등을 지목했다.

통합의 상징성보다 산업 기반 확충과 고용 창출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우선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초광역 체제의 성패가 결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오후 4시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국회 통과(3월 1일)를 기념하는 시도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

정 광주시장, 김태균 도의회 의장, 신수정 시의회 의장, 범시민협의회 위원, 시도민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특별법 주요 내용 브리핑을 시작으로, QR코드 실시간 투표 방식의 '시도민이 기대하는 변화', 시도민 대표 10명의 '내가 바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메시지 발표, 미래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실시간 투표 결과, 참석자들은 통합 이후 가장 기대되는 변화로 일자리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확대가 뒤를 이었다. 행정 통합이 구조 개편을 넘어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드러난 대

목이다.

무대에 오른 시도민 대표들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권역별 균형발전,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초광역 단위의 산업 전략을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그 성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도민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통합이라는 기회를 잡았다"며 "수백개의 특례가 담긴 통합특별법은 청년일자리특별법이다.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일자리가 많은 안전고용의 도시를 만드는 그날까지 특별시민 여러분과 최선을 다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남부권 3+1축 4대 권역을 중심으로 Y4-노믹스 비전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성장의 성과가 시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경제와 산업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균형발전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지난 1월 2일 5·18민주의성 민주주의관에서 발표된 '전남광주통합 공동선언' 이후 5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개 시군구를 순회한 공청회와 지역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 시도의회 설명회 등을 거쳐 법

안에 시도민 의견을 반영했다. 여론조사에서도 70% 안팎의 찬성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는 연 5조원, 4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4대 인센티브를 제시해 통합 추진에 힘을 실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명(전국 5위), 지역내 총생산 159조원(전국 3위)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된다.

전남과 광주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 수도를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첨단산업과 기간산업, 농수업을 연계한 산업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필리핀 의장대 사열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국민방문 환영식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민**

전남 농산어촌유학 358명 '전국 최다'

학령인구 감소 속 정주 연계형 교육모델 부상

전남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역 교육의 해법으로 '농산어촌유학'을 제시했다. 2025년 전남 유학생 수는 35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최근 4년 새 2배 이상 늘어나며 성장세도 가장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연구원은 3일 JN1 인포그래픽 '전남 농산어촌유학의 정석'을 통해 전국 초등학생 감소 추이와 작은학교 증가 현황을 짚고, 전남 농산어촌유학의 성과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생 수는 약 33만명 감소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감소폭이

더 컸다. 2025년 기준 학교당 학생 수는 수도권 526명, 비수도권 296명으로 격차가 뚜렷하다. 1970년 이후 누적 폐교 수는 비수도권 3,748개로 수도권(260개)을 크게 웃돌았고,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도 비수도권이 1,444개로 수도권(166개)의 9배에 달했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농산어촌유학이다. 도시 초·중학생이 일정 기간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특성과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도농 교류 프로그램이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가족체류형(초1~중3, 최대 5년), 학생 단독 참여인 농가

스테이형(초4~중3, 최대 5년), 농촌유학 센터형(초4~중3, 최대 5년) 등으로 운영된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7개 지방정부가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남은 358명(34.2%)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 282명(26.9%), 전북 257명(24.5%) 순이다. 전남은 2021년 168명에서 올해 358명으로 증가해 성장 속도에 서로 두드러졌다.

시·군별로는 구례 87명, 해남 63명, 곡성 34명 순으로 참여가 많았다. 프로그램 유형은 인문·독서(20.8%) 비중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예체능(17.0%), 생태전환(13.7%), 마을교육(12.0%), 공동체·학생자치(10.8%) 등으로 다양화됐다. 전남은 가족체류형 335명, 농촌유학선

터형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자체의 주거 지원과 유학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으며, 만족도는 80% 이상, 연장 비율은 61~73%로 나타났다. 22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박정우 연구위원은 "농산어촌유학은 학생 수 부족과 작은학교 활성화를 넘어 마을공동체 회복과 도농 상생이라는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주 전환까지 연결되는 중장기 정책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주 전환율과 만족도 등 핵심 지표를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시·군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온라인 체계를 활용한 홍보 강화 △전담센터 기능 보강 등을 과제로 제반도 갖췄다.

한편 JN1 인포그래픽은 지역 현안을 시가지로 제공하는 기회몰로, 전남연구원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ews1@**

김영록 "특별법 공포 후 통합시장 예비후보 등록"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공포 직후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김영록 지사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시일 내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이르면 6일, 늦어도 내주 초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사직은 유지되지만 직무는 정지된다. 이 경우 도정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통합특별시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는 만큼, 사실상 선거 국면에 들어



가는 셈이다. 김 지사는 오는 13일까지 광주 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

후보 등록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광주 지역 중심의 현장 행보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 확장이 필요한 광주 민심 공략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김 지사는 대재출입이었던 2일 광주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구 대촌동 고씨음주체 현장 찾은 등 광주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시, 무등산 중심사 상가지구 공영주차장 개선

16일부터 30일까지 정비

시실 노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 온 무등산 중심사 상가지구 공영주차장이 개선된다.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동구 율리동 993번지 일원에 위치한 중심사 상가지구 공영주차장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주차장은 2009년 5월 조성된 면적 약 1000㎡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중심사 상가지구 공영주차장을 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조성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서 노년 군열과 주차선 마모 등 시설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정비공사는 노면 보수, 주차면 도색, 차로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개정된 '주차장법' 기준을 반영해 주차면을 기존보다 30cm 확대, 문폭 사 고 등 차량간 간섭을 줄이고 보행 안전성을 높여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공사기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한다. 또 주차장 일대 현수막 게시와 함께 인근 중심사 공영주차장(동구 의재로 216 일원) 이용을 안내하는 등 시민 협조 홍보도 병행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초대 통합시장'서 계속

민 의원은 예비경선 단계에서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인 '당원 주권'과 1인 1표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경선을 치른 뒤 결선까지 가면 사실상 3단 경선 구조가 됨에 따라 TV 토론회 등으로 통합 비전과 미래 전략을 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배심원제 또한 그동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김 지사는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의 방식에 1대1 결선투표제를 결합하는 안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을 고려한 4인 경선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 정준호 의원 등은 공관위 제안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8명의 예비후보를 5명으로 압축하

고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선출하는 방식은 통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별 순회 선설과 토론은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이 비교·판단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5인 결선·배심원제·순회경선 채택을 환영한다"며 "공정한 경선 통해 지역민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병호 호남특위 수석부위원장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한 예비경선은 후보자들 알릴 기회"라며 "배심원제를 찬성하지만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게호 의원은 "지역별로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기존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전략지구 지정에 준하는 보완책 가운데 하나가 시민배심원제"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급적 많은 출마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려 한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광주시, 전기이륜차 100대 구입보조금 지원

차종별 최대 140만~300만원 지급...6월30일까지 접수

광주시가 전기이륜차 100대 구입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상반기 60대, 하반기 40대 등 총 100대이다. 상반기 60대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다자녀 가구 등에 6대, 배달 목적 구매자에게 12대를 우선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사업비는 3억

368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이다.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한 경우 보조금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은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상업용 전기이륜차를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및 농업인이 배달 목적으로 구매하더라도 중복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30일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으로 원동기 및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광주지역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개

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법인·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 내수 제한이 없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여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신고가 가능한 경우 제작·수입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 기후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